

“화정 아이파크 피해 복구에 전력”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된 가운데 9일 오후 경찰 수사본부, 고용노동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현장감식요원들이 붕괴 건물에 올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종자 구조 마무리...철거 등 후속 조치 전담 상시 조직 설치 유가족 지원·인근 주민과 상인 보상 노력...정밀안전진단 추진

광주 화정아이파크(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붕괴사고의 실종자 구조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거 여부 등 현장 대책과 피해자 민원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할 상시 조직이 설치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 주도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 구조당국은 지난 9일 실종 피해자 6명을 모두 수습한 뒤 구조활동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관리·감독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 주도로 후속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도 당분간 현장에 설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유지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함께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의 사고 수습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 후 30일간 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해결해온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시정에 정식 복귀했으며, 서대석 서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안정화 될 때까지 시청과 사고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

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승인권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붕괴 사고로 인한 건물 안전진단, 철거, 피해 보상 협의 등을 맡을 상설 기구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또 “현산은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사고를 계기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 실종자 구조 작업에 집중해온 서구는 앞으로 사고 현장인 201동 해체여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동 재시공 여부 등 현장 대책과 피해자 가족, 인근 상가 주민, 아파트 입주 대가자 지원 등 민원 대책으로 이원화해 후속 조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붕괴 건물 인근 주상복합건물 주민 110세대가 2주 가까이 이재민 생활을 했고, 상가 50여개 업체는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시민들도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해당 건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갈등을 중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과 현산 사이에 중재자 역할도 맡는다.

서구는 일단 붕괴한 201동 철거를 위해 현산 측에 안전강화조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붕괴한 201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정밀 안전진단 시점은 다음달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 다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떠나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민원 갈등이 예상된다.

서구는 실종자 구조작업 완료에 따라 사고 현장 수습에도 나선다. 수시로 낙하물이 떨어지고 있는 붕괴한 201동 남측 외벽과 좌우측 붕괴면을 우선 철거한다.

서구는 이 같은 현장 대책과 함께 민원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붕괴 사고로 숨진 피해자 6명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 보상 협의를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현산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보상 약속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서구는 또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지연에 따른 임시 주거 문제와 중도금 등 금융지원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사고 수습과 보상 등의 키를 현산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현산의 진정성 있는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은 “현산은 부실시공으로 붕괴사고를 유발해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본 것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그를 차원에서 피해 복구 및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민수당’ 신설·증액 조례안 예산 부담에 결국 폐기 되나

5만 광주·전남 농어민 입법청구 조례 심사조차 못 받고 폐기수순 농민단체 “재정 아닌 의지 문제”

5만명에 가까운 광주·전남 농어민이 연서(連署)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각각 입법 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 제정·개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전남에선 농어가 단위로 연 60만원씩 지급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농어민 개인에게 연 120만원, 75세 이상 은퇴농어민에게는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청구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를 거쳐 최근 도의회에 접수됐으나, 집행부와 의회 모두 재정 부족, 타 분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처리에 난색을 보이면서 오는 6월 말 현 도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광주에서는 농민 등 1만8000여 명의 시민이 발의에 동참한 농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 제정안이 2020년 1월부터 2년째 잠자고 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월 12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송부했다. 해당 의안은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도민 2만9597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 등 3개 단체가 지난 11월 4일 전남도에 입법 청구한 조례개정안이다.

전남도는 해당 조례안이 관련법에 따른 조례 개정 청구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 아래, 의안 원안을 의회에 송부하면서 전남지사 명의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의견서에서 전남도는 주민청구 조례안대로 농어민 공익수당이 증액·지급될 경우, 2022년 기준 1273억원(도비 509억원, 시군비 764억원)의 3배 이상인 4912억원(도비 1965억원, 시군비 2947억원)의 고정비용이 발생, 재정자립도가 낮

은 전남도와 시군 재정 운영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분야의 형평성, 국회 관련 법안 계류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제정은) 시기 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도의회에 전했다. 도, 시·군비 매칭 사업이므로 22개 시군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광호(민주당·신안2)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도 “(임시회가 열려) 상임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시군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안 상정과 처리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광주일보에 밝혔다.

3만여 명이 가까운 도민이 발의에 동참한 데다, 양대 선거를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도있게 논의될 법도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소관 상임위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의 수정 의결은 물론,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은 ‘수리 당시 지방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의안은 폐기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주민조례발안법 시행(2월13일) 이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수리된 것이어서 오는 6월 현 도의원 임기 동안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주민조례 청구를 주도한 전농 광주전남연맹의 김선호 사무처장은 “전남도와 도의회가 언급한, 재정 부담이 커서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분히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지자체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데 회순군은 올해, 연 120만원으로 농민공익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최근까지 전남도와 도의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 않으나, 재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확진자 ‘대선 현장투표’ 처리 무산

선관위 “현행 방식 투표관리 가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연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선투표 당일(3월 9일) 마감 시간 연장안(오후 6시~오후 9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을 3시간 늘려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기면서 당초 이날 정개특위 의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선관위가 공개 보고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분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마련한 ‘6시~9시 추가 투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동대로 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603번길 20(소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동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상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허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Mercedes-Benz